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¹⁾



A Transition to the Welfare Paradigm of Inclusion
and Innovation Through a Next-Generation
Social Security Outreach Information System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 본다. 이는 2010년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 운영에서 핵심적인 정보 전달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행복e음’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사회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면, 2016년에 황금종려

상을 수상한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사회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지닌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지서비스 신청·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두 가지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1) 최현수,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2018)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취약한 복지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하는 현실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 동안 사회보장 분야의 정보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확장돼 온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으나, 그동안 다양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도입,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의 한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는 데다,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과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 정보 접근성의 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집행 과정에도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방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 개통까지 약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면 재구조화한다.

2010년 구축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복e음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100여 개에서 350여 개로 확대되었고, 복지 대상자와 복지 예산의 규모는 2010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집행에 큰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행복e음 운영 초기에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 및 부정 수급 예방 등의 성과가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확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등의 위기 가구 발굴 등으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e음은

그림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배경: 복지사업 확대와 정보 인프라의 한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향. 내부 자료. p. 9.

기본적으로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 등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중심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2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설계 및 구축이 진행된 터라 현재 다양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거의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장되고,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의 유형과 데이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ICT 활용을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 및 소통을 강조하는 쌍방향 시스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자동화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해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정보 제공 확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보건-복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

그림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

비전	ICT를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		
목표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통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급여 관리 → 수요자를 먼저 고려한 쌍방향 시스템 ▪ 복지업무 폭증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 → 과감한 제도 개선과 자동화 ▪ 확장성 없는 난개발 → 표준화·모듈화·경량화로 유연한 시스템 		
분야별 추진 과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일선 복지 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찾아서 알려주는 포용적 서비스 강화 • 국민이 있는 곳에서 상담·안내하고 신청·접수 • 숨겨진 위기 가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이 함께하는 사례관리 표준 플랫폼 구축 •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보건과복지 간 정보 연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무 경감 및 현장 업무 지원 • 지자체·타 부처의 사회보장사업 기획·운영 지원 • 제때 확인조사로 뒤늦은 환수·상계 업무 경감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한 정책 결정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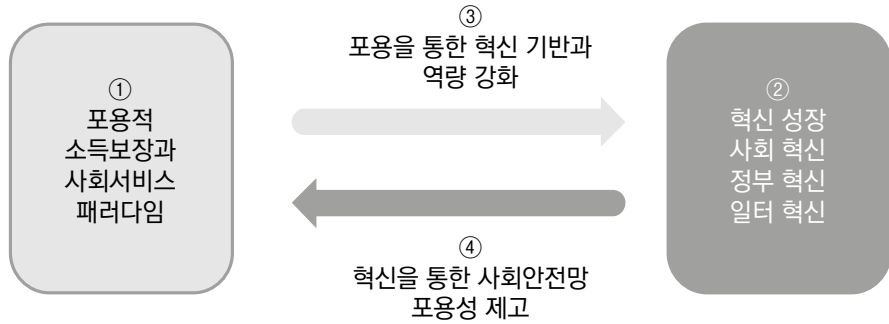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향, 내부 자료, p. 14.

반의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강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ICT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더 나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은 사회정책을 강화해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과 기

반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지속 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Inclusiveness)은 재분배 강화, 격차 해소, 계층 이동 확대, 다양성 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층적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영역(돌봄-일-쉼-배움)과 생활 기반(소득-건강-주거-환경/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①)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혁신(Innovation)은 기술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혁신이 아니며,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과 기업 및 사회제도 전반의 혁신 기반과 역량을 강화(③)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보장되는 국민

그림 3.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추진과 관련한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의 삶의 안정성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포용적 사회정책은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과 역량을 높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외와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사회정책 및 정보 인프라는 사회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신청주의 →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추진과 관련한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그림 3)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④)를 위한 새로운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지능정보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 주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운영에서 사각지대 문제 또는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현행 ‘복지로’ 등에서의 단순 검색 및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Welfare Curation’²⁾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양한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관련 맞춤형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재산 정보 및 서비스 신청과 수혜 이력 관리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복지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전달체계의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나아가 국민이 스스로 자산 조사 관련

소득·재산 정보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유선, 방문 등 각 개인이 편리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에서 시행 중인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확대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개별 복지사업법’으로 연계되는 법령 체계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을 담아 찾아 주는 복지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국민의 권리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로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2) 여기서 ‘Curation’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는 활용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개념을 보다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와 제2장(사회보장급여), 제3장(사회보장정보) 전반에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제4조(기본원칙)와 제2장 제2절(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제3절(수급권자 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거나 별도의 절에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복지급여 신청 탈락, 탈수급 또는 수급 중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혜 자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현재 부정 수급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확인 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급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찾아 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개별 복지사업의 법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는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기본 원칙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는 법령을 준용하여 개별 복지사업별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에 도입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표준 법령과 지침(안)을 도출하여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서,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적 포용국가 실천을 위해 중요한 정보 인프라 혁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수적이다. 포괄적 동의 절차에 기초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 제도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제약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확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예측 모형 구축, 위치 기반 시각화 및 공간 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정책 집행 관련 기준 및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선택권 강화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확대 개편된 홈택스 또는 최근 민간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입 확대되고 있는 찾아 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사전 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 가능하며, 복지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과 활용, 자신의 소득·재산 정보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 관리, 복지서비스 추천과 선택, 신청 상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나가며: 사회보장 정보 전달체계 혁신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조화

36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 규모가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근 보편적으로 확대된 아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 이외에도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기존의 사회안전망 확대·개편 전략은 대부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의 제고를 통한 제도

적 확장 및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정보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복e음 도입 초기에 중복과 부정 수급 방지 등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선 지자체 복지 현장과 학계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고 오해를 받았던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속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보편적인 복지제도 도입이나 확장과 함께 추진되며, 현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의 확대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사회정책의 확대 발전과 더불어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사

회보장제도 수급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득보장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회보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비전과 목표, 기본 방향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일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로 사회 구성원이 배제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최현수,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 (201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향. 내부 자료.